

이란 정부의 보조금 폐지 및 부가세 도입 추진 현황

□ 보조금 폐지 관련

- 2009년 10월 중순 이란 의회는 향후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 폐지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보조금 폐지 법안은 현재 이란 정부가 매년 식량과 에너지 부문에 지급하는 약 900억 달러의 보조금을 5년 안에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이란 정부는 보조금제도 폐지 이후에는 생필품 구매 보조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현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임. 현재 보조금체제하에서는 소비자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생필품을 동일한 가격에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지만 현금지급제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임.
- 동 법률안으로 이란 정부는 식량, 휘발유 등의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연간 1~2백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세계 제3위의 석유 소비국인 이란은 매년 예산의 약 38%가 휘발유 보조금으로 할당되고 있음.
- 보조금 폐지 법안의 채택은 이란 정책당국이 이란 핵개발 강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휘발유 수출제재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는 정책이 재정악화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에 덜 취약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임.
- 보조금을 줄이는 첫 해에 정부는 100억~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나, 휘발유 가격은 3배, 가스 가격은 5배로 뛰게 되고, 만약 휘발유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에 근접하게 되어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정부의 재정수입은 50억 달러 가량 증가하게 됨.

- 경제학자들이 보조금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와 관련, 전체 보조금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0%에 달하여 보조금의 폐지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보조금 삭감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70%가 넘는 이란 국민은 월 45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란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천 6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금번 보조금 삭감 조치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하여 이란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고에 대한 보상을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성격의 보조금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이러한 생각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이란이 통상 매년 노르즈(신년 새해)를 거치면서 20% 이상의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조금 삭감을 강행할 경우 적어도 35%가 넘는 고물가 시대가 예상됨.
 - 이란 정부 에너지 실무 담당자에 따르면, 전력요금의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이 폐지되면 국민부담은 6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란 정부는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면서 보조금 폐지 법안에 대한 헌법수호위원회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란 정부와 의회가 그 시행을 놓고 지속적인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향후 1년 동안의 정부예산의 약 400억 달러를 보조금제 폐지로 인한 후속 정책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의회는 이미 승인한 200억 달러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하미드 레자 의회 위원회 의장은 원래의 보조금 법안 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부가가치세 시행관련

-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하여 이란 헌법수호위원회(The Guardian Council)는 부가가치세 법안에 대해 이미 2008년 5월 25일자로 승인한 바 있으며 2008년 9월 22일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그러나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2008년 10월 부가가치세 시행을 정지시켰는데, 테헤란 및 이스파한의 보석상 등 시장상인들이 3%의 부가가치세 도입에 항의하여 상점을 폐쇄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 강력하게 저항함에 따른 것임.
 - 부가가치세 도입은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취임 시 원유 수입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두 자리 숫자 물가상승률 등 경제 정책 실패로 논란에 휩싸여 왔음.
 - 부가가치세 도입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물가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왔음.
- 2008년 6월 이란정부가 모든 사업자에 판매금액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메카니즘을 발표하였으나, 시행이 임박하면서 이란의 상업적 중심지인 테헤란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시행에 저항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났음.
- 이란 전역에 걸친 10일간의 치열한 상인들의 저항에 직면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적어도 1년 동안 부가가치세 시행을 연기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란 주재원 제공>